

제 2 과 목 : 민 법

41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명인방법은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.
- ②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.
- ④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.
- 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.

42.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물권은 재산권이다.
- ②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이다.
- ③ 소유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.
- ④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- 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.

43. A의 운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甲이 즉사하였다. 甲에게는 아버지 乙과 아내 丙이 있고 丙은 丁을 임신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, 丁은 丙과 공동으로 甲의 재산을 상속한다.
- ② 丁이 사산된 경우, A는 丁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, 丁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, 甲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.
- ④ 丁이 살아서 출생한 경우, 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.
- ⑤ 만일 A의 운전과실로 甲이 아닌 丙과 丁이 동시에 즉사하였다면, 甲은 丁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.

44.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ㄱ. 매매예약완결권
- ㄴ.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
- ㄷ.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
- ㄹ.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
- ㅁ.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ㄹ, ㅁ
- ⑤ ㄱ, ㄷ, ㄹ, ㅁ

45.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의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.
- ④ 가정법원은 신체적 장애만으로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.
- ⑤ 취소 가능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행위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.

46.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.
- ⑤ 후순위 상속인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
47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·감독한다.
- ② 감사는 사단법인의 필요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.
- ③ 법인은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④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을 뿐이고, 청산종결의 등기가 있게 되면 잔존사무가 있어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.
- 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며,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
48.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.
-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.
-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.
- ④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.
-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49.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내연관계를 해소하면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효하다.
- ②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.
- ③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준 경우,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④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계약은 무효이다.
- 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.

50.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그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,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.
-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이든 묵시적인 방법이든 묻지 않는다.
- ④ 무권대리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,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.
- ⑤ 무권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51.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, 의사표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.
-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할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.
- ④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⑤ 가장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
52.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
- ② 여관·음식점의 숙박료·음식료의 채권
- ③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
- ④ 의사·약사의 치료·조제에 관한 채권
- ⑤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

53.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제104조는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,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.
- ②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경솔,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,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
-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-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.
-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주인에 의해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.

54.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?

- ① 대리행위
- ② 상속의 승인
- ③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
- ④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
- ⑤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

55.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, 계약금으로 1,000만원을 수령하였다. 위 매매계약은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乙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, 乙은 甲에 대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.
- ③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, 乙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
- ⑤ 甲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56.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②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.
-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,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.

57.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.
-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.
- ③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·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.
- ④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.
- 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,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.

58.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말소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소멸한다.
-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경매에 의한 물권변동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발생한다.
- ④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.

59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.
- 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60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지역권은 재산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.
-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- ③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,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.
-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.
- 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더라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.

61.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- ② 총유자는 총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.
-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④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
- ⑤ 합유자는 분할금지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
62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,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
- ②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,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.
- ④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,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다.

63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.
- ②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,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.
- ③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,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.
- ④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.
-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
64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존속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하면, 건물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특약시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, 면제되는 수선의무에는 대규모의 수선도 당연히 포함된다.
-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- ④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登記하지 않은 경우,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登記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

65.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.
-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,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.
- ⑤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.

66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,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②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- ③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.
-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
67.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,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.
- ②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- ③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.
- ④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,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.
- 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성립한다.

68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.
- ②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③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.
- ④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69.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종류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·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⑤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.

70.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.
- ②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공사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다.
-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71.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.
- ②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,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정기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.
- ④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자가 이미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, 일부이행이 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

72.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임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위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수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.
-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,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
73.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.
- ③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주가 과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④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.
- ⑤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.

74.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조합원이 사망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.
- ②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- ③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.
- ④ 조합은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.
- 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.

75.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.
- ③ 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
- ④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매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
76.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임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.
- ②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.
- ③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
- ⑤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무상의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77.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건물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② 지상물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어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.
- ③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.
- ④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건물을 신축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78.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차주는 목적물의 사용·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,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.
- ② 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·수익할 수 있지만,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여야 한다.
- ③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,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.
- ④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,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,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.

79. 토지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토지를 전대한 때에는 그 전대차는 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-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후 두 사람의 합의로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.
-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,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.
-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,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⑤ 토지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(前)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.

80.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계약금이 전액 지급된 후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,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甲에게 귀속된다.
- ② 乙이 계약금 1,000만원 중 일부인 50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1,000만원을 상환하면 된다.
- ③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④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배액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지만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.
- ⑤ 甲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줄 의무와 乙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